

2024년
11월 9일
(토) 15시
전국집중

참지 말고 몰아내자 ! 윤석열 정권 퇴진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 11·9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 총궐기 | 교육지

2024년 10월 12일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02-2670-910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3년을 기다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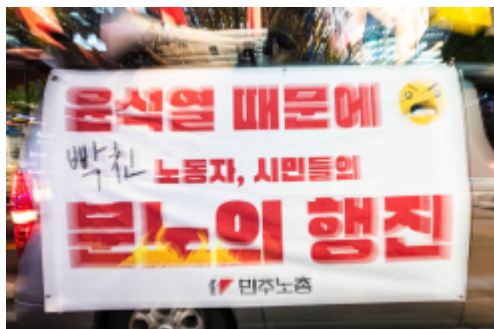
**정권 퇴진과
사회대전환으로!**

민주노총은 2024년 하반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건 투쟁을 시작했다.

퇴진 투쟁의 첫 포문을 여는 9.28 시국 대회는 14개 광역시도, 5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적 퇴진 열기를 확인하며 광장투쟁의 신호탄을 쏘았다.

9.28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는 요동치는 정국의 한복판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돌입했으며, 광장을 열어내는 기폭제로서 압도적 퇴진 국민투표를 성사해 내고자 한다.

또한 항쟁의 거리를 그저 말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 거리 실천으로 광장을 열고자, 매주 수요일 분노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으로 '윤석열 퇴진'을 건 집회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는 퇴진 투표 운동의 토대 위에, '대통령 하야, 탄핵, 퇴진' 등 윤 정권을 몰아내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 공동 대통령제였던가? 김건희 이름 빠진 뉴스 찾아보기 힘든 지경.

지난 10월 2일,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 화폐법이 재차 거부되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24개로 늘어났다. 또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불기소한데 이어, 주가조작까지 무혐의 처분을 강행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오로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검찰까지 동원하여 온 나라가 '김건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쏟아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매일 매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고속도로 보상금 노려, 국민TV 황

제 관람..’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불법, 비리, 무능이 드러나며 고쳐 쓸 수 없는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 이름 석자 빼고는 대한민국 뉴스가 성립이 안 될 지경에 이르며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자 윤석열에게 국민은 없다. 사법부는 검찰 인맥으로 장악하고,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데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입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국회를 제치고 실질적인 입법권자로 행위하는 것으로 헌법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렇듯 대통령 부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실체가 속속히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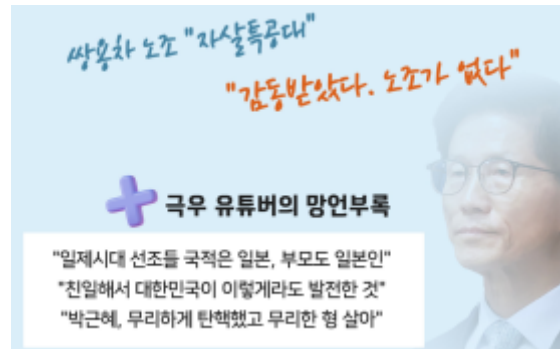
역대 최악의 빌런, 끝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행보!

윤석열은 집권과 동시에 민주노총 죽이기를 소위 국정 개혁 과제로 놓고 출발했다. 장시간 주 69시간 노동, 노동유연화 등 반노동정책은 물론 노조를 ‘범죄 집단화’‘척결 대상’으로 놓고 심지어,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 취급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노조 회계 공시 압박, 타임오프 기획 감독 등 꾸준히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시도를 집요하게 진행해왔다.

또한 역대 두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실질임금은 2년 연속 하락,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에도 재벌 편들기에만 급급한 윤석열 정권. 최근 극우 망언 제조기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노동자가 죽어도, 임금을 안 줘도, 사업주 100명 중 1명만 실형을 받는 이 기막힌 현실은 윤 정권 아래 더 악화의 길로 가고 있으니,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윤석열을 끝내야 노동자가 산다”

민생은 지옥고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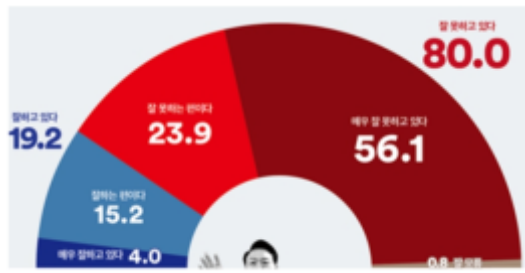
윤 정부의 역대급 부자 감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급 세수 핑크 30조원,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5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만 2천 억원 육박, 차입 횟수도 75회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빌린 횟수도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의 부자 감세 (3년간 부자감세 81조,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 16조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 규모가 1896조에 이르렀고,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에 육박,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44만 3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제 2의 국가부도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은 윤 정부 2년 새 이전 정부 5년보다 더 뛰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서민 지옥의 나라를 지독하게 견뎌내고 있다.

민심의 분노 지수는 이미 탄핵 마지노선을 찍었다.



윤석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여론조사의 꽃 10·14 발표)대로 진입했다. 긍정 평가가 19.2%, 부정 평가가 80%로 집계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부정 평가가 80%에 이른 것과 비교할 때, 현재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의 척도가 어디 정도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도권 국정 지지율 역시 18%로 2주 만에 9% 급락했다. 민심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여론은 퇴진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서 매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압도적 여론형성으로 광장투쟁 열어낼 것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걸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추진본부”를 결성. 10월 8일부터 국민투표에 돌입했다.

국정 지지율의 10% 진입, 특검 찬성 65%, 탄핵 청원 동의 143만. 이 모든 지표를 뛰어넘어 퇴진 민심을 압도적 대세로 만들기 위한 행동전을 시작한 것이다. 이미 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고, 심리적 탄핵 마지노선은 절정에 이르렀다.

탄핵 결정을 행사할 국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민의 명령이 하나로 집약되는 대중적인 행동전으로 국민투표를 상정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 국민 실천 행동으로 압도적 퇴진 여론을 형성하고, 광장투쟁을 열어내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나라는 쑥대밭으로 요동치는데 윤석열의 선택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0월이다.

아리셀 중대재해를 비롯, 산재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자본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위 김건희-명태군 게이트로 국감이며 뉴스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오히려 거짓 논란으로 확산, 의혹이 사실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낯 뜨거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명태군 사건의 경우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한

개입 수준과 관련 폭로 내용이 광범위하여 보수 진영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등 불법행위는 머지 않아 심판대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적 대격돌의 시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해 전쟁 조장 징후가 위험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은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는 "그런 적 없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나라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이 윤 정권이다.

사태 원인은 외면한 채, 북 오물 풍선 부양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데만 몰두하는 윤 정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대북 전단(올해만 무려 73회 대북전단 살포됨)이 군사 충돌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 대북전단부터 원칙대로 제재하는 것이 윤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이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것은 곧 민족 공멸의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궁지에 몰린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이 살 것이냐, 노동자가 살 것이냐.

서로가 죽기 살기로의 대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국민이 살자면 윤석열을 끝내야 한다.

폭발하는 민심, 최절정에서 치뤄질

11·9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총궐기

전진하는 역사의 불변의 진리,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힘은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 민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며 압도적 여론의 기폭제로 퇴진 투표를 성사시키고, 요동치는 민중이 광장을 열어내는 정세 속에 우리는 11월을 맞게 될 것이다.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전면적으로 폭로된 조건에서 치뤄질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의 위력적인 투쟁으로 범국민 퇴진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월 9일을 전민중이 함께 만드는 퇴진 총궐기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광장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퇴행과 독재로 나라를 망치는 윤석열! 기필코 종지부를 찍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쟁취합시다! 120만 민주노총이 돌격대가 되어 투쟁의 광장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